

카자흐스탄 · 러시아, 카스피해 북부 분할협정 체결

- 카자흐스탄과 러시아는 최근 카스피해 북부 분할협정에 조인함으로써 연안국들간 카스피해 영유권 문제를 해결하는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양국은 이번 협정에서 카스피해의 양국간 중간선을 특별히 해저의 분할좌표로 설정하였으며, 중간선에 걸쳐 있는 Kurmangazy, Tsentralnaya, Khvalynskoye 등 3개의 석유·가스 유전은 50 : 50의 지분으로 개발하는데 합의함
 - 이번 협정은 '98년 4월 양국간에 체결된 「해저면은 분할하되 해상은 공동관리」키로 한 합의에 근거한 것으로, 지난 4월 개최된 투르크메니스탄 5개 연안국 정상회담에서 카스피해 영유권 문제에 관한 특별한 합의를 이루지 못한 상황에서 조인된 것이어서 더욱 의미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음

- 카스피해는 세계최대의 內海로서 국제해상법(International Maritime Law)의 적용을 받지 않고, 구소련 붕괴 이전에는 구소련 및 이란의 1940년 「카스피해 지위협정」 등을 통해 카스피해의 영유권을 규정해 왔음
 - 「카스피해 지위협정」에서는 연안 12마일까지는 인접국이 영유권을 행사하되 그 외 수역은 공해로 인정키로 하였었음

- 그러나, 구소련 붕괴이후 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잔, 투르크메니스탄 등 연안국이 독립하고 카스피해에서 잇따라 대규모 유전이 발견되면서 이를 둘러싼 국가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히게 되었으며, 영유권 문제도 더욱 복잡하게 됨

- 러시아, 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잔 등은 자국내 카스피해 해안선의 길이에 따라 해저면을 분할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며, 이란은 연안 5개국이 동등하게 지분을 보유할 것을 주장하고 있음
 - 해안선 길이 기준으로 분할시 러시아, 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잔은 각각 19%, 29%, 21%의 지분을 보유하게 되며, 이란은 해안선 길이를 기준으로 할 경우 13%이나, 5개국 공동 분할시에는 20%로 높아지게 됨
- 이번 카자흐스탄·러시아간 쌍무협정에도 불구하고 이란은 여전히 자국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카스피해 영유권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 연안국 5자간 협정체결까지 이르기에는 다소 시일이 소요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최근 알리에프(Heidar Aliyev) 아제르바이잔 대통령의 이란방문에서 하타미(Mohammed Khatami) 이란 대통령은 카스피해를 자국내 지명을 본딴 “Mazandaran Lake”로 지칭함으로써, 영유권 문제에 대한 입장이 종전보다 다소 유연해졌다는 일부 분석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국중심의 주장을 굽히지 않을 것임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음
- 한편, 카자흐스탄은 러시아와 6월중 향후 5-10년간 연간 16백만톤의 카자흐스탄 석유를 러시아를 통해 운송하는 협정에 조인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러시아는 이외에 카자흐스탄에 대해 Baku-Novorossiisk pipeline을 통해 향후 15년간 연간 15백만톤의 카자흐스탄 석유를 운송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짐